

## <要 約>

- 鄧小平 死後의 중국의 과제는 ‘經濟 部門間 不均衡 處理’, ‘地方 分權化에 대한 中央政府의 統制 調整 能力’, ‘不正 腐敗의 追放’, 그리고 ‘拜金主義 思想에 따른 社會 問題’임.
- 지금 실시중인 不正 腐敗의 척결은 邓小平이나 姜澤民 측근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층에 관련된 문제로 邓小平이 죽기전부터 시작함으로써 邓小平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 강력한 推進 基盤을 形成하고 邓小平 사후에도 名譽 維持를 위한 것이지, 강택민 측근이 權力 爭奪의 道具로 사용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음.
- 鄧小平 사후의 後繼 問題는 북한 김일성의 사후와는 달리 후계자는 없고 後繼 權力 集團에 의한 통치만이 남게 됨.
- 姜澤民은 후계 정권의 중추적 인물이면서도 권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권력 투쟁은 權力의 掌握이 아니라 自己 保護나 現狀 維持를 위한 것임.
- 邓小平 사후 교석, 이서환, 군의 대표인 유하청같은 黨內 그룹과 조자양, 양상곤 같은 在野 그룹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사항임.
- 中國의 世界觀은 ‘세계에서 중국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야만족(국가)들이다’라는 中華 思想에서, 세계를 크게 양분하여 ‘서유럽 문명의 세계가 있고, 중국의 전통적 문명과 문화의 세계가 있다’는 新中華 思想으로 바뀌고 있음.
- 중국의 外交 基調도 親제3세계, 反제국주의, 反식민주의에서 國家 經濟 發展을 위해 西方과의 긴밀한 協調 關係 維持와 주변 정세의 安定과 平和 希求로 바뀌고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北韓 一邊倒였으나 남한과 修交 후 그 기조가 平和와 安定을 위한 南北韓 共存의 外交로 돌아 섰음. 그 기본은 安保와 政治 問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經濟 問題는 남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임.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간의 代表部 設置 協商 과 韓半島의 非核化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을 血盟 關係에서 정상적인 國家 관계로 보고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긴밀한 추종자로 기대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원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對美 西方 世界 接近을 경계해야 하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음.
-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중국에서는 정치는 강력한 中央 執權 體制를 유지하고, 경제는 매우 광범위한 地方 分權 體制로 움직이고 있음.
- 地方 分權化의 큰 원인은 人民公司의 해체와 農業生產請負制로 인한 拜金主義와 세금을 지방에서 걷어 중앙정부에 바치는 稅制請負制가 오늘날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
- 중국 경제는 EU의 경제와 같이 各省의 國民 經濟가 집합되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事業 推進은 각 지방마다 법의 적용이 다르고 法治보다는 人治의 성격이 크므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함.
- 중국이 ‘開發의 重要性’을 국가 시책으로 인식한지 몇년 안되는 시기 에 우리가 전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사람들의 慣習 및 特異한 法體制와 ‘관시’라는 對人 關係의 따른 파악과 이에 따른 적합한 행 동이 중국과의 사업에 관건이 됨.

## 鄧小平 以後의 中國과 韓半島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질적으로  
반공적 성격  
의 공화당  
주도 의회가  
들어 서고  
나서부터  
입니다.

### 1. 머리말

오늘날 中國의 事情과 韓半島의 關係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일 전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 오는 도중에 워싱턴과 뉴욕에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美國의 中國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본질적으로 反共的인 성격의 정당인 共和黨 議會가 들어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공화당 의회가 臺灣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人權과 民主化에 대해 감각이 특히 예민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현재 美議會 内에서 이 두 그룹이 결합되어 大衆 政策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美國務省 예산에 授權法이란 것이 있습니다. 授權法 안에 있는 정책 조항에서는 ‘티벳을 國際法 上의 獨立 主權 國家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티벳의 대표자를 지금 인도로 망명한 다라이라마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라이라마에 대한 大使級의 代表를 보내도록 하라’는 식이며 이 시행 결과를 6 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린턴 行政府는 이에 대해 만약에 그것이 법률로서 확정·통과된다면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중국에 대해 그런 자극적인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美 行政府의 정책은 의회의 그런 공세적인 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수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美 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아시아 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對아시아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北核 問題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은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으로 봐서도 미국 정부가 지금 평하고 있는 정책이나 교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美 행정부가 對아세아 지역의 정책에 있어서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2. 鄧小平 死後 中國 課題

### 등소평 사후

과제는 첫째,  
국내 각부문  
간 경제 불균  
형 해소  
둘째, 중앙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셋째, 부정  
부패의 추방  
넷째, 배금  
주의로 인한  
사회 문제  
해소 등  
입니다.

먼저 鄧小平 이후의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글도 쓴 일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등소평 이후 양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등소평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과제인데 첫째, 가장 어려운 과제는 중국이 經濟 問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年 24%의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통이나 에너지, 교통, 통신 부문은 2%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에 아시겠습니까만 여기에 굉장한 불균형이 있고 앞으로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後繼者들이 풀어야 할 큰 課題라고 봅니다. 둘째, 중국도 경제에 관해서 地方 分權化가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中央政府의 統制 調整 能力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危機 管理 能力이 과연 중앙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중앙정부를 통솔하고 있는 후계자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셋째, 不正과 腐敗의 추방입니다. 이 부정과 부패는 중국 체제와 그 사회에 있어서 體質化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정 부패 문제가 아니라 체제 가운데 깊숙히 뿌리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후계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넷째,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拜金主義 즉,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共產主義 理念에서는 굉장히 異端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민중의 의식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이탈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社會 問題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政治 體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또 이것 역시 후계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 돌아가 不正 腐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姜澤民 등의 上海派가 권력 투쟁의 방법으로 부정 부패를 추방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택민은  
새로운 후계  
정권의 중추  
인물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권력 기반이  
없는 상태입  
니다.

등소평 사후  
교석, 이서환,  
유하청 같은  
당료 그룹과  
조자양과  
양상곤같은  
재야 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가 있습니다.

조금 비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 부패의 추방은 중국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비단 鄧小平 측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택민 측근 아니 중국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지 않고 등소평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등소평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써 보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등소평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죽기 전부터 시작함으로써 등소평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등소평 사후의 명예 유지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하는 것이지 등소평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강택민 일파가 권력 투쟁의 도구로써 부정 부패 척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權力 戀爭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력 투쟁이 없을 것이냐 하면 저는 역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력 투쟁이 지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 통치상의 권력을 강택민 일파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강택민 일파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강택민 일파들의 黨, 軍, 全人大, 그리고 政治協商委員會 등 네 가지 그룹에서의 세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택민이 새로운 후계 中樞的 人物임을 인정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權力 基盤이 없이 집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경우에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自己 保護나 現狀 維持를 위한 것이지, 더 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내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강택민외에 교석, 이서환, 군의 대표인 유하청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재야에는 6·4 天安門 事態로 쫓겨난 조자양이나 국가 주석을 했다가 거세 당한 양상곤같은 사람들이 과연 등소평 사후에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 유의할 것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 문제가 나올 것인지 여부입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는 바로 조자양의 재등장 가능성

등소평 사후  
후계 문제는  
김일성 사후  
와는 달리  
후계자의  
개념은 없고  
후계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강택민이하의  
사람들이  
서로 견제  
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  
지는 통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자양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간 사람입니다만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를 다시 복귀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상곤의 문제입니다. 양상곤도 정치적으로 뒤로 물러선 사람입니다만, 최근에는 廣東省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주 왕래하고 있어 광동성이 하나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택민은 잘 아시다시피 上海 사람이이고 이 상해 그룹이 지금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동성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만약 상해 그룹이 北京을 점거했다고 할 때 광동성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 그룹이 정치적 반격의 큰 세력이 되어 양상곤같은 사람을 등에 업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상곤은 원래 군 출신인데 장성급에서는 양상곤 그룹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중급 장교 그룹에서는 양상곤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이 앞으로 권력 투쟁이 일어날 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의 향배가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만, 군의 대표가 중국을 통치하는 권력자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權力 爭鬥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로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킹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군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권력 투쟁에서 조정과 킹 메이커의 역할을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鄧小平 死後의 후계 문제는 金日成의 死後와는 많이 다릅니다. 김일성은 공산당 조직 내의 당의 총서기와 정부의 국가 주석이라는 헌법상 혹은 黨規上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후계자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1년이 다 됐는데 왜 당 총서기나 혹은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지 않느냐고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등소평은 이미 그러한 자리에서 다 물려났습니다. 다만 1987년 11월 2일에 열린 黨 제13기 제1차 중전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秘密 決意를 한 것이 있습니다. ‘등소평 동지는 평생에 공산당의 결정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등소평이 最高 權力者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등소평이 죽으면 그 결의는 소멸됩니다.

그러면 등소평의 자리는 없어지고 그 후에 남는 것은 정상적인 공산당식에 의한 통치 기구 다시 말해 黨과 國家라

中國의  
세계관은 '이  
세계는 중앙  
에 중국이  
있고 그 외에  
는 모두  
야만족, 야만  
국가들이다'  
라는 中華  
思想에서  
'이 세계에서  
서유럽 문명  
체제가  
있음을 인정  
하지만,  
동시에 동양  
에는 중국의  
전통적 문명  
과 문화가  
있다'라는  
新中華 思想  
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는 二重 體制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택민 이하의 사람들  
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라는 말은 사실 적합하  
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個人的인 이미지로서의 후계자  
는 없어지고 현재 강택민 이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후계  
권력 집단에 의한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中國의 韓半島 政策

이제부터 中國의 韓半島 政策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세계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中華 思想으로서 '이 세계는 중국이 중앙에 있고 그 외는 전  
부 다 야만족, 야만 국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 오히려 新中華 思想으로 표현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상에  
서는 중국은 이 세계에 西유럽 文明 體制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와 동시에 東洋에는 중국의 傳統的인 文明과 文化가  
있음을 또한 주장합니다. 즉, '너희들의 세계가 있고 우리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며, 중국의 어떤 활동이나 사고 방식  
은 서유럽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소위 人權이나 民主化  
에 대해서 중국은 '그건 너희들의 개념이지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대로의 인권과 민주화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혹자는 농담하기를 중국에도 民主  
主義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 통치를 지도하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 일반 대중은 民이고 나 공산당은  
主人이므로 그래서 민주주의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  
마 농담이 좀 섞인 이야기지만, 중국 사람들은 유럽의 민주  
주의와 중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공산 국가들인 國中과 구소련을 비교해 볼 때, 舊蘇聯이 중국과 다른 점은 이 나라가 어디까지나 西유럽 指向  
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소련은 유럽 문명 지향적이었지만 중  
국은 유럽 문명하고는 항상 격리된 상태에서 東洋 文化, 自己 傳統 文化와 文明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中國 外交 基調의 變化입니다.  
과거의 중국 외교는 구소련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미국  
이나 여러 제국주의에 대한 祖國 守護라는 의미에서 외교의  
기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큰 방향은 親제3세

중국은 향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측과의  
관계 심화'와  
'평화와 안정'  
이라는 기조  
로 돌아 서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조가 중국  
의 對한반도  
기조가 될 것  
으로 봅니다.

중국은 韓中  
수교후 북한  
일변도 정책  
에서 남북한  
의 공존을  
전제로 한  
외교로 돌아  
섰습니다.

계, 반제국주의, 反식민주의의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최근, 등소평 이후에는 중국의 무역은 GNP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0%, 16%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의 對外 貿易 依存度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GNP의 10% 이상을 무역이 차지하면 대외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36%, 60%는 분명히 대외 의존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 歐美의 시장 진출과 자본 시장 참여, 또 구미의 技術導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방측과의 관계를 심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기조를 변화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기조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周邊 情勢가 安定되고 平和스러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이 두 가지 기조 가운데에서, 주변 정세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정책의 기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분명히 北韓 一邊倒의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와 수교한 후 중국의 정책 기조는 南韓과 北韓의 共存을 전제로 한 외교로 돌아섰습니다. 북한 일변도 정책에서는 남북한을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타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은 남북한을 등거리로 보고 있다든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든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安保와 政治問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經濟問題에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첫번째는 韓半島에서 平和와 安定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現狀維持입니다. 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현재 두 정권이 서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평화이고, 두 정권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韓·中修交의 동기는 經濟的動機도 물론 있겠지만 政治的動機가 더 강하

**중국이  
한국과 수교  
할 때 북한에  
알리지 않은  
것은 구소련  
의 한국과  
수교시 교차  
승인하지  
않은 전례,  
북한의 방해  
우려, 그리고  
중국이 북한  
의 豁서방측  
접근을 원치  
않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중국의  
對한반도  
자세에 대한  
변수는 北·  
美간의 대표  
부 설치 협상  
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입니다.**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두 가지의 매우 섭섭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과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단독적으로 남한과 수교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볼 때 중국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대한민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중국은 교차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인데, 북한에 대해 對美 修交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舊소련이 한국과 수교할 때 교차 승인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으니까 중국도 반드시 해야 할 도의적 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交叉 承認 問題를 제기하면 반드시 북한이 방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교 문제가 북한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너무 집요한 對南 접근의 반대 자세가 오히려 귀찮아서 북한과 상의없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너무 강한 입장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상당히 재미있는 동기라고 보는데, 결국 중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측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카드, 모스크바에 대해서는 북경 카드를 써서 중국을 골탕 먹인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만일 북한이 미국이나 혹은 일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 위싱톤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경계심이 있어서 중국은 북한의 서방측 접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간에 代表部 設置 問題에 대한 협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니면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對북한 자세에 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對한반도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요인은 한반도의 非核化 問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중국이 너무 非協調的이다', '왜 影響力を 발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북한  
에 대한 입장  
은 혈맹 관계  
가 아닌 정상  
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엮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  
이 국제 사회  
에서 중국의  
긴밀한 추종  
자 입장에서  
행세해 주기  
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식량  
과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北韓의 核問題에 대해서는 미국과 똑같이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어느 쪽이든 핵무기의 보유해서는 안됨을 누차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李鵬 총리가 왔을 때도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됨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警告性 發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렸다면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북한이야 말로 북경의 바로 코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고성이 아니라 상당히 實質的인 行動에 나서면서 그것을 막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對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식 처방에 동조하면 미국의 추종자 밖에는 되지 않고, 또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미국과 똑같이 본다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우습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 자체와 목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남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다른 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똑같은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 하나는 과거처럼 6·25 전쟁 당시의 맺어진 血盟 關係에 대해서 이미 중국은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는 正常的인 國家對 國家 關係를 엮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상당히 긴밀한 追從者 立場에서 행세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에 대해서 식량과 원유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매우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이 붕괴되어 국가로서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매우

중국은 북한  
의 소멸을  
강력히 반대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한이 북한  
을 흡수 통일  
했다고 하면  
바로 압록강  
건너에 개인  
소득 1만  
달러의 나라  
가 생기고,  
조선족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만주와  
동북부 지역  
은 각각 곡창  
과 중공업  
지대라는  
것이 중국  
에게 큰 위협  
이 되기 때문  
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지도를 놓고 주변 국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14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14 개국이 모두 중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인데 만일 북한이 국가로서 소멸해버려 우리나라가吸收統一을 했다고 하면, 바로 압록강 건너에 중국의 개인 소득 350 달러의 20여 배인 개인 소득 1만 달러의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2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중국의 만주와 동북부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穀倉 地帶이면서 重工業 地帶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같은 緩衝 地帶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북한에게 중국의 추종자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북한의 미국같은 나라에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한계선 가운데 적절한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중국으로서는 식량과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 중국은 1993년을 계기로 원유의 순수입국이 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93년 당시의 통계를 보면 중국이 678만 톤의 원유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마다 10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해 왔습니다. 원유의 순수출국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93년 이후는 사실상 自國도 수입하면서 100만 톤을 북한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입장은 식량의 경우 중국도 부족 상태에 있는데 또 북한에 공급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이 두 가지 부담이 향후 중국의 對북한 정책, 그리고 對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변수로 나타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요인입니다.

#### 4. 中國 經濟의 特徵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큰 특징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鄧小平 등장 이후 중국은 國家的 指導 理念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외교의 기조가 변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

중국은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의 경제 이념  
을 부인하고  
정반대 개념  
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人民  
公司 해체와  
농업 개방  
으로 지방  
분권화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  
입니다.

가적인 지도 이념도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산 국가가 그렇습니다만,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기본 지도 이념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經濟理念이고, 레닌주의는 공산당에 의한 獨占的 獨裁統治 이념입니다. 마르크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장악하는 상태에서의 경제 정책인데,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실질적으로 마르크스 주의를 부인하는 조치였습니다. 改革과 開放이라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일반 시장 경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최소한의 시장 경제 하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마르크스주의와는 正反對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부인하고 레닌주의에 의한 공산당 통치는 아직도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中國統治形態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정치에 있어서는 강력한 中央執權體制를 유지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地方分權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지방 분권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언급을 안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소평이 1978년에 집권을 한 후 맨 처음 시도한 조치 중에 하나가 人民公司의 철폐와 농업 개방이었습니다. 모택동 공산주의에 대한正面否認인데 그것을 없앤 후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곡식의 얼마까지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자유 시장에 팔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농업이 갑작스럽게 발전하게 되었고 12억의 농민들이 돼지비곗살이라도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農業生產請負制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땅을 얼마 줄 테니까 소득의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마는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에 위배되는 拜金主義 즉, 개인적 활동으로 개인 재산을 모은다는 그러한 소위 反革命的이고, 反社會主義의 인사고 방식을 장려한 것이 오늘날 중국의 큰 문제를 자아내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등소평이 취한 두번째 조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행한 財政請負制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稅制請負制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지방  
분권화의  
원동력은  
세금을 지방  
에서 걷어  
중앙에 바치  
는 식의 재정  
(세제)청부제  
입니다.

등소평 집권  
이후 분권화  
조치는 중국  
의 경제 발전  
에 도움이  
되었으나, 사  
회의 부정 부  
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지방에서 걷어 중앙정부에 바치는 것입니다. 최근 2년전부터는 分稅制라는 것을 실시해서 國稅하고 地方稅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걷을 수 없고 국세청 조직이 전국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徵稅를 위탁했던 이 재정청부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오늘날 중국 경제에 있어서 地方 分權을 장려하게 된 큰 원인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이 재정력을 다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우선 鄧小平 執權 이후의 그러한 두 가지 조치가 오늘날 경제 발전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長點이 되었고, 그 후 사회의 不正과 腐敗, 그리고 기타 국민들의 意識 構造 變化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잘못되면 중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험론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서유럽 각국, 홍콩 언론,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보는 시각들은 제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선적으로 유의 해야 할 점은 중국 경제가 單一 國民經濟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국에는 맥주가 약 2,000 종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맥주는 크라운맥주, OB맥주 등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시판되는 맥주 가운데 '넥스'는 서울에서도 살 수 있고, 제주도의 서귀포 음식점에서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단일 국민 경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단일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버드와이저를 사고자 하면 뉴욕에서도,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서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제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2,000 종의 맥주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경제를 諸侯 經濟라고 하는데, 그 지방의 제후들에게 경제력이 이미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EU 경제와 같다고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

중국의 경제  
는 EU와  
같이 그 밑에  
廣東 經濟,  
福建 경제 등  
의 국민 경제  
들이 집합  
되어 이루어  
지고 있습니  
다. 따라서  
법 적용이  
지방마다  
다르고, 법  
보다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에서는 ‘되는  
일도 없도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  
다.

습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의 국민 경제 등 여러 가지 국민 경제들이 집합해서 EU를 이루고 있듯이 중국 경제라는 것도 EU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廣東 經濟, 福建 經濟 등의 국민 경제들이 집합되어 하나의 중국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결론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北京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률이 중앙에서와 같이 지방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치보다 인치여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문은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다 관장하고 있지만, 많은 부문은 지방정부가 관장하는데 그것도 省정부가 아니라 市정부까지 내려가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안에서 경제권과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省 또는 어떤 市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모든 상황을 조사해야지 北京의 도서관에 가서 법제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공장 운영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물을 斷排水하는 담당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법대로 움직이느냐, 전기도 갑자기 정전되는데 그 사람이 정전 시킴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담뱃값을 주면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50년대와 60년대 초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사람보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비관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東北 3省, 山東省과 華南 지대의 廣東省이나 福建省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東北 3省 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경제제도를 보면 福建省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이어서 제조업을 하는 어떤 회사가 원자재를 들여 올 때 원자재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면 그대로 그 회사 창고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테이너를 푸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물론 녹색신고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福建省 당국

중국이 ‘개발의 중요성’을 국가적 시책으로 인식한 지 몇 년 안되는 시기에 우리가 진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의 관습 및 특이한 법 체제와 대인 관계를 빨리 숙지하여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이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은 아주 잘 발달된 세계 一流 制度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백 미터 지나갈 때마다 일일이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吉林省의 長春에서 물건을 싣고 大連까지 가는데 省의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통과세를 내야 합니다. 통과세를 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그 곳을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통과가 안되니까 이것이 바로 통과세가 되어 현실적인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5. 맷음말

앞에서 언급된 ‘되는 일도 없고 또 안되는 일도 없는’ 이묘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국 진출이 사실 일본보다 20년 정도 뒤졌습니다. 20년 정도 뒤진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 20년간 일본이 진출해서 많은 고생을 통하여 이룩한 것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빨리 배운다면 그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이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적 시책으로서 인식한 것은 최근 몇 년입니다. 이 몇 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면 칙사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습과 특이한 법체제 그리고 ‘관시’라고 하는 對人 關係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숙지하여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사업 상의 접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방 세계의 관행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